

## 시대의 전환

코로나19위기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시스템이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가 열리기도 한다.

저자: 마르크 작서(Marc Saxer) / 작성일: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팬데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경제적, 정치적 여파는 벌써 윤곽이 그려진다. 전지구적 감염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로 세계 전역의 공공생활(public life)이 중단되었다. 중국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나라의 생산공장이 멈추어 섰다. 국제적 공급사슬들이 끊어졌다. 간신히 버티던 산업부문들이 줄도산 사태를 겪게 되는 상황은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사재기 소식이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불안감에 휩싸인 소비자들은 사재기마저 그만두기 시작했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자 소비도 위축되었다. 그 결과 안 그래도 어려워지기 시작한 유럽국가들의 경제는 리세션(경기후퇴)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

중국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자원시장이 타격을 입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러시아와 유가 안정화를 위한 원유감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략을 바꾸어 시장에 싼 원유를 대대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국제유가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소비자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러나 유가전쟁, 리세션 우려, 금융시장 악재 등으로 증시가 무너질 것이다. 그나마 주요 중앙은행들의 단호한 개입 덕분에 아직까지 금융경색(financial crunch)이 방지될 수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중앙은행들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신속하게 포괄적 대응패키지를 마련해 임박한 경제위기를 막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역시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경기부양책과 경우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긴급조치들이 내리막길에 접어든 경제를 구해내기에 충분한지는 위기가 시스템에 얼마나 깊이 잠식하게 될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과거의 팬데믹 사례를 보면 경제가 단기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가도 대부분의 경우 빠르게 성장세를 회복했다. 과연 이번 코로나19위기 때에도 그러할 지는 이번 팬데믹의 지속 기간 등에 달려있다.

더 큰 걱정은 충격의 파장들이 부실한 금융시스템을 강타하고 오래 전부터 우려되었던 금융부문의 문제들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다수의 기업과 개인가정이 부채가 과다한 상황이다. 중국에서도 그림자금융, 부동산기업과 국영기업 및 지자체 등이 부채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 은행들은 현재까지도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탈

리아 경제가 무너지면 유로화 위기가 재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상누각들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국채로 몰리는 현상을 통해 확인된다. 코로나19 위기는 국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중앙은행들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늘까지 전 세계 모든 주요 국가의 금리는 기록적인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환매 조건부 채권매매(Repo)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투입해 주기로 했다. 유럽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신임총재는 처음에는 유럽의 위기대응에 대한 첫발질로 유로존의 응집력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주요 중앙은행들이 협조개입을 통해 시장의 혼란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코로나19 위기가 과연 통화정책적 도구로 통제가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문제에 대한 답은 위기의 본질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정부 내 포퓰리스트들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야당 포퓰리스트들에게는 반가운 상황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위기는 경제에 국한된 위기가 아니다. 이번 위기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민의 건강과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 역시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리바이어던으로서의 근본적 정당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 있는 유라시아 국가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 약속을 토대로 권력을 유지하는 스트롱맨들의 정당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반면 태국과 필리핀의 지도자들은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을 가볍게 여겼고 그 결과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도 공격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완수하는지 여부는 미국에서 치러질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정부 내 포퓰리스트들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야당 포퓰리스트들에게는 반가운 상황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2008년과 2015년 위기 때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기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본다. 수십 년 동안 추진된 긴축정책 이후 고갈된 국가와 특히 제대로 굴러간다고 보기 어려운 보건의료시스템이 대규모 위기를 극복해 나갈 여력이 있거나 한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 국가에서는 돈, 재화, 사람의 자유로운 유통 및 왕래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초국가적 감염병의 확산으로 국제적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뿐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세계화와 유로화도입의 패자가 될 것을 걱정하였다. 여기에 긴급조치, 경제적 충격 그리고 새로운 난민위기까지 더해졌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출신의 우파포퓰리스트인 마테오 살비니와 같은 사람들은 “개방된 국경, 위험한

타인, 부패한 엘리트, 방어력 없는 국가"라는 재료를 이용해 독성이 강한 합성물을 만들어내는 법을 잘 안다.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우파포퐁리즘에 맞선 방어전 속에서 민주당은 시민 모두의 건강과 삶을 보호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 개인의 자유권은 어느 수준까지 제한될 수 있단 말인가? 예외적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서구사회는 중국이 선택한 것 같은 극단적인 대응방식을 수용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에서처럼 개인보다 집단을 더 우선시해야 할까?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팬데믹의 확산 속도를 무슨 수로 떨어뜨린단 말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것뿐이라면, 도대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초국가적 감염병의 확산으로 국제적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뿐이다. 유럽 내에서도 상호 연대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탈리아는 이미 유로화 위기와 난민위기 때부터 동료들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다. 중국은 유럽국가들이 충분히 연대하지 않는 상황을 포착하여, 일대일로-파트너 국가인 이탈리아에 의료구호품을 가득 실은 항공기를 보냈다. 독일 정부는 그 사이 코로나와 난민이라는 이중적 위기의 지정학적인 규모와 여파를 인지하였고 유럽을 분열시키려는 외부세력의 시도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의료보호장구의 수출금지가 다시 완화되었고 이탈리아에는 백만 개의 마스크를 긴급구호품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강대국 사이의 새로운 갈등들이 현재의 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다. 우선 지리경제학적 이유 때문에 유가전쟁이 일어났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많은 범대서양 파트너 관계는 이번 위기로 인해 또 한 번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직면했다. 유럽 동맹국가들을 협의 없이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독일 튀빙겐 소재의 큐어백(CureVac)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독점하기 위해 이 기업을 인수하려 했던 미국의 시도는 독일정부와의 실질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의 위기대응은 상상하기 어렵다. 서구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먼저다"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강대국 사이의 새로운 갈등들이 현재의 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다. 우선 지리경제학적 이유 때문에 유가전쟁이 일어났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갈등은 석유수출기구(OPEC)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기록적인 유가 폭락의 최대 피해자는 아마도 빚더미에 앉은 미국의 셰일유 산업계가 될 것이다. 과연 미국인들이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기름값이 낮아져 좋아할 날을 경험하게 될 지는 이 소모전 속에서 누가 가장 오래 견디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어쨌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출로 버티고 있는 경쟁자 미국을 게임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

유가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되던 간에 석유시장의 권력구도는 새롭게 조정될 것이다. 수십 년 째 이어지고 있는 석유생산정점(peak oil)을 둘러싼 논쟁 역시 흥미로운 전환을 맞게 될 것이다. 어쩌면 석유산업이 화석연료의 고갈 때문에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낮은 유가가 지속될 경우 석유가 계속해 생산할만한 경제적 가치를 잃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지리경제학적 이유로 인한 갈등이 의도치 않게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코로나19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변화 즉, 탈세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제적 분업이 서로 경쟁하는 경제블록으로 분산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헤게모니 갈등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미국 경제를 중국 경제로부터 분리시켜, 미국과 세계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중국의 경쟁력을 미국의 돈과 기술로 키워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한 초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지 오래다. 글로벌기업들은 하루아침에 공급 사슬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번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기업경영진은 정말로 미국이 추구하는 지정학적 전략과 반대되는 선택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은 중국 공급사슬에 대한 높은 의존도의 값이 얼마나 큰지 명백하게 보여준 이번 위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 기업 화웨이(Huawei)가 유럽의 5G 인프라 확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유럽은 수개월 전부터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변화 즉, 탈세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제적 분업이 서로 경쟁하는 경제블록으로 분산될 수도 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막대한 양의 돈이 시장에 풀려 “급진적”이라고 평가되었던 민주당 대권주자인 샌더스원의 공약이 소소한 용돈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다. 독일의 경우 어제만 해도 쿨너트 사민당 청년대표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던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기업의 국유화에 대하여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 속에서 그저 순진한 어린애의 상상속 일들에 불과하다고 치부되었던 일들이 슬픈 현실이 되었다. 국제선 항공편의 운항이 중단되다시피 했고 난민위기 때 절대 봉쇄될 수 없다고 했던 국경들이 폐쇄되었다. 그리고 보수정치인인 죄더바이에른주 총리 역시 자연스럽게 “균형예산(Schwarze Null)”의 포기를 선언했다. “우리는 회계 관리 차원의 문제에서 벗어나 독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

40년 동안 팽배했던 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회의론 대신에 이미 오래 전 잊혀졌던 사실이 재조명된다. 국가는 원하기만 한다면 여전히 강력한 형성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시대 즉, 다른 모든 사회적 이해보다 시장의 이해를 우선시 했던 시대는 종말을 맞게 되었다. 물론, 지금 취해지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모두 매우 예외적인 현재의 상황에 기인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들을 떠올릴 것이다. 위기 덕분에 오랜 기간 경직되었던 정치계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팽배했던 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회의론 대신에 이미 오래 전 잊혀졌던 사실이 재조명된다. 국가는 원하기만 한다면 여전히 강력한 형성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시대의 지정학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단층선(fault lines)을 스포트라이트로 비추듯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이 혹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은 것일까? 급진적인 세계화 시대가 거대 경제블록의 상호연계가 끊어지면서 종식되는 것일까? 유가전쟁이 화석연료 산업의 종말을 가져올 것인가? 국제 금융시스템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나? 세계 주도국가의 바통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다극적 세계질서의 부상을 경험하게 될까?

코로나19 위기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일련의 변화들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 변화들은 숨막히게 빠른 속도로 상호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복합성은 코로나19 위기가 지난 금융위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해준다. 팬데믹 상황은 글로벌 시스템위기라는 화약고에 던져진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중단(disruption)의 순간, 직접 느낀 속도 줄이기 경험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맞서는 데 요구되는 장기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는 거대한 현장실험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각자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시험하고 있다. 출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화상회의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대학 교수들 위니버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다.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한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이 원래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새로운 근로 방식이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환경과 가정생활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며 배웠다. 우리는 이러한 중단(disruption)의 순간, 직접 느낀 속도 줄이기 경험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맞서는 데 요구되는 장기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제레미 워너는 이번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다음과 같은 냉소적 표현으로 정리하였다.“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위기가 장기적으로 유익한 점도 있다. 과도해진 노인 인구를 정리해주기 때문이다(sic).” 국가 간 비연대적인 위기대응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이웃과 직장동료와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를 돕고 연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과 환자를 돕기 위해 자본주의라는 기계가 중지되었던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던가? 우리는 현재 경험하는 연대정신을 기반으로 전체로서의 사회를 다시금 보다 연대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다.” 단결하는 사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이러한 대응방식에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굳게 닫혔고 비자 발급이 중단되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주문량이 기록을 갱신한다는 소식은 이번 위기 때처럼 근로가 불가능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산업의 자동화가 앞다투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실직, 사회적 추락에 대한 두려움,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 자유주의적 기득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란의 악순환을 보다 촉진한다.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독일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곧 역량 있고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며 보호주의적인 정권이 필요한 순간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필립 레그레인의 경고가 타당성 있다.“코로나 위기는 선천적 국가주의 자들과 보호무역주의자들에게는 정치적 선물이다. 코로나위기는 외국인이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위기 속에서는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우리는 우파포퓰리스트들에게 위기를 정의하거나 해석할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봉쇄와 국가이기주의가 글로벌도전과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연대와 국제적 협력이 그 답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생전처음 국가비상사태를 경험하였다. 며칠 사이에 자유권이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못했던 수준으로까지 제한되었다. 중국에서뿐 아니라 유럽 한 북판에서도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술 장비들이 광범위하게 투입되었다. “대테러전쟁”에서 그러했듯이 지금 발표된 재난규정 중 다수가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예외상황의 상례화 이면에 조르조 아감벤과 나오미 클라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개인을 재난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에 순응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지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권들이 영구적으로 빼앗기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슬라보예 지젝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며 정곡을 찌른다. “사람들은 국가권력을 향해 ‘권력은 너희에게 있으니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라!’라는 정당한 요구와 함께 책임을 묻는다. 유럽은 중국이 취한 조치들을 투명하고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입증해내야만 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동시에 어떻게 가능한지는 동아시아의 민주주의국가들인 한국, 타이완과 일본이 인상 깊게 보여주었다.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독일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곧 역량 있고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며 보호주의적인 정권이 필요한 순간이다.

위기가 닥치자 우리는 또다시 케인스주의자가 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위기가 지나간 후 긴축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선 수 년 동안의 긴축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보건의료시스템이 몰려드는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지방병원들의 폐쇄, 만성적인 간호 인력의 부족, 낙후된 의료장비 등의 기존 문제들이 이번 위기에 여실히 드러났다.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민영화를 철회하자는 요구가 이렇게 많은 지지를 얻은 적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민영 병원과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들이 순식간에 국유화되었다. 독일에서도 우리의 공존을 시장의 지배하에 놓은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었는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앞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핵심이 개인의 이익과 이해가 아니라 공익추구가 되어야 한다.

포괄적 공공서비스의 재건은 수십억 유로 상당의 투자를 요한다. 메르켈 독일연방총리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부채 제동(debt brake)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나중에 재정수지 상황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위기 속에서 독일 정부는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경제 살리기 패키지를 마련해 소규모 자영업체와 프리랜서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솔츠 연방재무장관이 약속했다. 알트마이어 연방경제부 장관도 5천억 유로 상당의 보증한도는 앞으로 나올 다양한 조치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위기가 닥치자 우리는 또다시 케인스주의자가 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위기가 지나간 후 긴축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수십 년 동안의 긴축정책으로 보건의료 및 교육, 지방행정, 교통인프라, 연방군, 경찰 등이 낙후되었다. 사람들이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디지털 혁명을 대비해 경제와 사회를 준비시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역사적인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20대 경제강국이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세계적 위기는 우리가 초세계화로 인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 감염병은 매우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 국제적 공급사슬은 너무나 쉽게 끊어질 수 있다. 금융시장은 위기에 취약하다.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국경을 닫고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전염병, 전쟁, 이주, 무역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올바른 답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위기의 발생 원인을 퇴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경제가 저항력 있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제적 공급사슬들은 재편되기 시작했다.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둔 미국기업이나 동유럽에 생산공장을 둔 유럽기업의 경우처럼 공급사슬이 짧으면 더 높은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기술적으로 유럽은 다시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더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국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재편이 시급하다. 중앙은행들은 십여 년 전부터 통화정책만으로는 디플레이션 추세를 통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위기가 닥치자 각 정부가 나서서 팽창적 재정정책을 펼치며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는 '대표 없이 과세도 없다'는 의회주의의 기본원리의 회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금융시스템들이 다시 민주주의적 통제 하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상호의존성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이러한 갈등은 국제적 규범과 다자적 협력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역량 있는 위기관리를 통해 팬데믹 대응을 위한 다자적 협력의 모범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20대 경제강국이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한편으로는 강대국들 간의 지정학적인 경쟁, 다른 한편으로는 국경봉쇄를 주장하는 우파포퓰리스트들의 요구가 국제협력을 가로막는다. 기존에 존재하는 다자적 거버넌스의 요소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재정구조 개선을 시작으로 경제위기관리를 조율하기 위한 G20 회담 개최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때 다자주의 동맹(Alliance for Multilateralism)이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경제활동 및 공존 방식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치명적 위협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어떠한 정치세력이 이에 필요한 사회적 타협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미국의 정치학자인 세리 버먼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지며 질문한다. "사회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